



## — 산업정책 · 산업동향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2. 중견기업 육성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
3. 경제계 "배출권 거래제 연기해야"
4.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공식 출범
5. 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봇물
6. FEFCO] 유럽 종이 재활용률 71.7% 기록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됐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오너)의 승계 요건도 완화돼 피상속인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만 있어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최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연간 2,400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복무를 마친 후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포함하는 등 안전·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라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확대와 요건완화도 환영했다. 그러나 “사전증여특례 한도 확대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골판지포장물류 9·10월호 특집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중견기업 육성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중견기업의 범위와 지원 방안을 17개 조문으로 정했다.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연금업 운영기업, 비영리 법인은 제외된다.

외국 법인의 자회사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 연매출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 기업으로서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번 중견기업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내용은 골판지포장물류 9·10월호 ‘그건 이렇습니다’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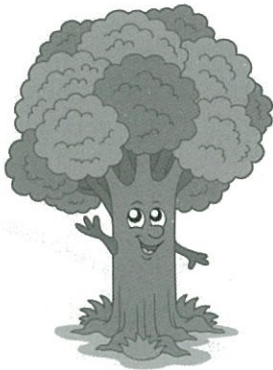
### 3. 경제계 “배출권 거래제 연기해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둘러싸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7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 준수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산정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4.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공식출범



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제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도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성과보상기금)이 지난 8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성과보상기금 출범식을 개최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이직, 특히, 기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이 15.1%이고, 근로자의 66.6%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실정이며, 중기청의 최근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고, 핵심인력의 82.0%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사유는 자기발전 기회와 임금수준이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연수, 교육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가 성과보상기금이다.

성과보상기금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됐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했다.

성과보상기금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

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재직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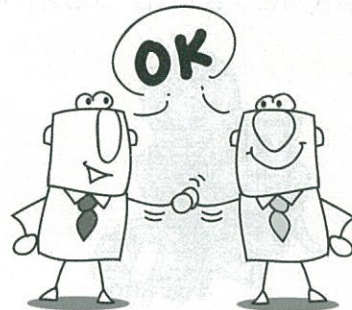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해 핵심인력은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리 2.68%(매년 변동)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세전수익률 264%)을 받을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가 결합되어 장기제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이 제도 시행 전 실시한 조사에서 핵심인력



의 81.5%, 중소기업의 92.5%가 성과보상기금이 장  
기재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핵심인력들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이라는 자긍심, 체면을 세워준다는 측면  
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핵  
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관리·운영기관인 중소기  
업진흥공단에 문의(055-751-9000)해 신청할 수 있  
으며 홈페이지(www.sbcplan.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 5. 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봇물

은행들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 보신주의’  
질타 이후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잇따라 쏟아  
내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 11  
일 정부의 새 경제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  
식·기술금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 3대 핵심테마’를  
선정하고 기존 연간 20조원 수준인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기업, 우수 기  
술력 보유 창조기업, 유망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중점 지원분야에는 총 5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8월 13일에는 KB금융그룹이 은행, 카  
드, 캐피탈 등 계열사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을 추가로 5조원 확대하는  
총 3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12  
조원 늘리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계획’을 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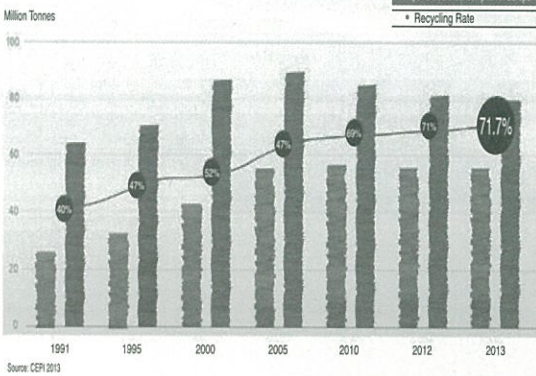
NH농협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7월말 54조 8,000  
억원인 중소기업 대출을 2017년 말까지 66조원으  
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인과 개인사업자 지  
원을 위해 담보가액의 1.6배까지 지원하는 대출상  
품인 ‘하나 중소기업 행복나눔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 6. FEFCO] 유럽 종이 재활용률 71.7% 기록

유럽의 종이 재활용률이 지난 2013년 71.7%를 기록하였다. 유럽내에서 종이 소비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제지부문을서 수거되고 재활용된 종이의 총량이 약 5천 7백만톤 이상으로 안정적인 유지세를 보이고 있다.

EUROPEAN PAPER RECYCLING  
1991-2013



[그림 유럽 종이 재활용률 (1991 ~ 2013)]

재활용률은 1998년 이후로 45%(1천 8백만톤) 가량 증가했고, 이는 유럽재생용지위원회에서 종이 재활용에 대한 유럽인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시점부터 기록한 결과이다.

유럽종이재활용 비율은 고르게 유지되기 시작했고, 더 높은 비율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이보다 더 도전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재활용하는 종이양의 변화가 아닌 종이소비패턴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신문용지의 경우 골판지상자와 더불어 주된 재활용 종이제품임에 따라 신문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는 전반적인 종이재활용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럽의 주요 11개국은 현재 여전히 60% 미만의 재활용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타 13개국은 목표한 70%의 재활용률을 이미 초과하였다. 제지용섬유는 현재 전세계적인 평균인 2.4회를 넘어서는 3.5회 가량 재활용하고 있다.

유럽재생용지위원회 위원장인 Beatrice Klose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해가 거듭될수록 쉽고 간편하게 재활용을 하는 것은 종이 가치사슬상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데 이번 긍정적인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이 재활용률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원재료 활용은 유럽내에서 점점 더 경제 전략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의 종이 재활용은 확실히 ‘유럽산’이라 자부할 수 있다. 앞으로 유럽 연합 (EU) 정책에 발맞춰 이 산업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종이 재활용 분야는 준비되어 있고, 더 많은 녹색 일자리, 유럽 순환 경제에 기술 및 혁신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FEFCO 기사 제공]